

팔복예술공장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 조성

전주시, 2단계에 '야호 예술놀이터' 착공

전주산업단지 폐공장에 지역예술가를 위한 예술창작공간인 팔복예술공장에 이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전주시는 사용되지 않는 폐공장을 재활용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팔복예술공장 2단지인 야호 예술놀이터 조성공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문화관광체육부의 '2018년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

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팔복예술공장 2단지 야호 예술놀이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 1월 공사에 착수했다.

새로 들어서는 문화예술교육센터에는 △예술교육관 △예술활동관 △야호 예술놀이터 등의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기존 팔복예술공장 1단계에 조성된 전시공간과 창작공간, 카페 등과 최대한 연계해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공간조성이 완료되는 오는 하

반기부터는 전주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술 창작과 놀이 중심의 융·복합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팔복예술공장에 입주한 상주 예술가와 함께는 팔복 AB(Art-Beetle) △야호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팔복초등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나만의 생일케이크' 지난 15일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이달이 생일인 드림스타트 아동 11명과 가족 등 30여명을 초청해 '나만의 특별한 생일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미래농업 연구현장 '스마트온실' 살펴보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오전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인공지능 음성 등이 지원되는 스마트온실을 살펴보고 있다.

"5·18 망언 한국당 국회의원 제명하라"

전주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민주주의 헌정질서에 대한 모독... 국회 추방해야"

전주시의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3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폭동', '북한군 개입',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등 악의적인 왜곡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위한 광주민중들의 뜨거운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한 모독과 망언은 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모독이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들이 국회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위한 광주민중들의 뜨거운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한 모독과 망언은 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모독이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들이 국회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쏟아낸 의원 3명을 즉각 제명하고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과 망언은 희생자들에게 기만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며, "이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해당 의원 3명에 대한 즉각적인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최신 IT기술 활용 기업 성장 돕는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2일까지 지역SE융합제품상용화 지원 기술개발 수요조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해 관련 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진흥원은 오는 22일까지 '2019년도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지원사업' 과제 및 참여기업 발굴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최근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적용 가능한 SW융합 신서비스 개발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제안 대상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가능한 과제 또는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SW융합 신서비스 개발 상용화 과제 등이다.

특히, 최근 기술트렌드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드론, 사물인터넷(IoT), 혼합현실, 정보보호, 블록체인 및 클라우드 분야와 지역사회 현안해결 서비스인 안전(안전, 국토, 교통),

자원(환경, 에너지), 복지(의료, 복지), 문화(문화, 관광, 교육), 행정(민원, 생활)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에는 전북도 소재 ICT/SW 기업들은 단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수요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수요 제안배경과 기술동향, 경제적측면, 추진내용, 기대효과 및 상용화 계획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수요조사 제안서를 작성해 전자우편(satum@jca.or.kr)을 통해 제출하거나 진흥원 ICT융합사업단 SW융합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수요제안들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 △추진체계 △목표의 명확성 △사업내용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검토·보완·기회확하게 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4월 신규 지원과제로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ca.or.kr)의

사업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흥원 SW융합팀(063-281-4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K리그 개막전 준비 '구슬땀'

전주시청공단이 다음달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와 대구FC의 2019년 K리그 챔피언스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다.

공단과 경기장 측은 VIP실과 선수대기실, 관람석 등 경기장 내부에 대한 대청소와 임시주차장, 주변도로 등에 대한 환경 정비, 전광판과 음향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온을 위해 그라운드에서 쳐두었던 차광막을 걷어내고 잔디 보호 및 밀도 유지를 위한 예방시약, 시비, 배토에 관리요원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시즌 K리그 개막전은 3월 1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송효철 기자

이향로 진안군수 징역 1년 '법정 구속'

'홍삼 선물세트 살포'... 재판부, 1심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향로 진안군수(62)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재선을 위해 측근과 공모해 설과 추석명절에 기부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군수가 기부행위를 도운 나머지 측근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주겠다고 독려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이권 획득이 어려워진 측근이 범행을 폭로하려 하

자 본인과 부모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측근 박모씨(43)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군수가 돌린 홍삼 선물세트는 측근 김모씨(42) 업체에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군수 측근 박씨와 진안 모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41),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씨(42) 등 공범 4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석훈 기자

'재산 허위 신고 혐의' 김이재 도의원 1심서 무죄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재 전북도의원(58)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도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9억 5천만 원 상당의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누락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당선 후 재산내역을 모두 포함해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다"며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선거 사무장이 업무에 미숙해 재산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선거 사무장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범죄 고의성을 부인한 바 있다.

/강석훈 기자

'성완중 리스트 무죄' 이완구, 민사소송은 패소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성완중 리스트' 보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운)는 지난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서 마치 비타 500 박스가 금품의 전달매체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이 전 총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제했다.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할 당시 현금 전달매체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비타 500 박스를 봤다고 진술하거나 이를 경향신문 측에 언급했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품의 전달매체를 비타 500 박스로 표현한 것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기사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의 청렴성·도덕성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 바 '성완중 리스트' 메모이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스

잡든 손님 지갑에서 현금

흥천 중국인 종업원 입건

손님이 잡든 틈을 노려 현금을 훔친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국인 A모씨(3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2시 9분경 전주 시내 한 마사지 업소에서 B모씨(37) 지갑에 있던 현금 3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A씨는 B씨가 잡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했으며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손님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

'취약계층 위한 희망 일자리'

전주시, 올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기로 했다.

시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2019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신청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총 참여인원은 130명으로 오는 4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 일반노무와 행정업무로 나누어 담당하게 된다. 주요사업 내용은 △DB구축지원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기타사업의 4개 분야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실업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치고 신청일 현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만18세~65세 미만 시민이다.

또,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 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야간대, 방통대 제외)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령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의 노임당가는 보통 65세 미만 단순노무의 경우 간식비 등 부대비용 포함해 1일 3만8400원이며,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조건이다.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1일 5만5100원에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이다.

공공근로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55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병문안 가서 통장 훔치다 덜미

지인의 병문안 중 통장을 훔쳐 260만원 인출한 70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15일 절도 혐의로 A모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4시경 고창군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B모씨(74)의 통장을 훔친 뒤 2차례에 걸쳐 26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으로 오는 B씨와 친분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대신해 현금 인출을 했으며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이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금인출기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통장을 보니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